

빈곤한 청년에게도 평등한 기초생활보장을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함께 한 가구로 묶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만 한다.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구주가 돼도 부모 세대와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.

이성원(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)

<밥 굶는 아동>, <밥 굶는 아버지>, <밥 굶는 노인>, <밥 굶는 청년>. '이 가운데 누가 제일 불쌍하지 않은가'라고 물었을 때 십중팔구는 청년이라 답할 것이다.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의 가난은 공감 받지 못한다. 매년 청년실업률(지난 1월 체감 실업률 23.2%)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, 'N포세대'부터 '흙수저', '이생망'(이번 인생은 망했다) 등 청년들의 자조적 풍조가 만연한데도, 청년의 가난은 젊은 날의 푸념 정도로 여겨져 왔다. 특히 1950~1970년대 절대빈곤을 경험하고 1997년 국제통화기구(IMF)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청년의 빈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. 그래서 청년은 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.

이러한 기성세대의 시선은 지표로도 드러난다. 서울신문은 지난해 10월 설문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'청년빈곤 인식' 조사를 시행했다. 그 결과 청년층(20~30대) 10명 중 8명(76.7%)은 빈곤이 심각한 세대로 자신들을 꼽았다. 특히 20대는 79.5%가, 30대는 72.5%가 자신을 빈곤하다고 여겼다. 이에 반해 40대 이상 국민 10명 중 3명(36.4%)만이 청년층이 빈곤하다고 여겼다. 10명 중 7명은 청년보다 다른 세대가 더 빈곤하다고 생각했다. 특히 60대 이상 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기성세대는 46.7%였다.

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도 서로의 시선은 엇갈렸다. 청년은 사회 시스템을 탓했고, 기성세대는 청년을 탓했다. 20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질 나쁜 일자리(61.0%)와 불합리한 채용구조(52.%)를 꼽았다. 30대는 질 나쁜 일자리(59.0%)를 꼽았다. 반면 40대 이상은 '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'를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했다. 40대와 50대가 각각 62.7%, 60대 이상은 60.7%였다. '질 나쁜 일자리'를 원인으로 본 경우는 40대가 36.8%, 50대가 31.9%, 60대 이상은 22.6%였다. 가난한 청년에게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기성세대도 많았다. 40대는 61.9%, 50대는 71.1%, 60대 이상은 74.4%였다.

이러한 인식 차이는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. 특히 청년들은 사회보장의 기본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은 배제돼 있다. 부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면 청년이 독립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.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(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%·51만 2102만원), 의료급여(중위소득 40%·68만 2803원), 주거급여(중위소득 44%·75만 1084원) 등이 포함된다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함께 한 가구로 묶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만 한다.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구주가



해도 부모 세대와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. 예를 들어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지만 홀로 서울에서 독립한 30세 미만 청년이 있다. 이 청년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. 청년들은 부모에게서 지원받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. 청년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도 중앙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.

난센스인 건 통계청의 가구 집계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.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가구주가 된다. 통계청은 이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류한다.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청년을 별개의 가구로 인정했지만, 기초생활보장에서는 한 가구로 분류하는 것이다. 사안에 따라 한 가족이라 볼 수도 있고, 다른 독립된 가정이라 볼 수도 있다 해도 엄격하게 따지면, 통계청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.

물론,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은 어울리지 않는다. 건강한 청년이라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더라도,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. 놓고먹는 청년에게 생계비를 주는 것 또한 아직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.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근로능력평가를 하기도 한다. 그러나 분명한 건 일하고 싶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청년,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은 존재한다는 점이다. 만약 이 청년들의 부모 역시 이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면 이들은 절대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. 게다가 청년들은 아예 법으로 막혀 있다.

기초생활수급의 나이 규정을 당장 없애지 않더라도,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다. 현 만 30세 미만 기준을 만 25~27세로 낮추자는 것이다. 우리나라에선 대학에 다닐 때까지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만큼, 대학을 졸업한 이후만큼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. 또 길을 열어준다고 모든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진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건 우리 청년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.

‘실신 세대’라는 말도 생겼다. 청년 실업과 신용불량자를 더한 합성어로 우리나라 청년의 현주소를 지칭하는 또 하나의 단어다.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·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 344명의 청년을 분석했더니 10명 중 8명(78%-269명)은 ‘생활비 부족’으로 빚을 졌다. 유희이나 무절제한 소비 등으로 빚을 졌을 거라는 편견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. 국가가 보장해야 할 그들의 기초생활을 위해 그들은 빚을 진 건 아닐까. 청년들에게 생색을 내가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, 가장 우선해야 할 건 다른 세대들에게 다 주는 기초생활부터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일이다.